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, 청년농 농지은행제도개선 초기자금 부담완화

✎ 이재기 기자 | ⌚ 승인 2026.10.29 11:03

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%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 혜택 제공
농지은행 활용 청년농가 영농 규모 확대와 안정적 정착 지원



청년창업농 농지은행 맞춤형 상담 모습.(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)

(청주=국제뉴스) 이재기 기자 = 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김경한)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지은행 제도개선안을 본격 시행하며, 청년층의 농지 확보와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.

농지은행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,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(1순위)과 2030세대(2순위)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과 임대를 맞춤 지원하는 제도다.

이 제도는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'선임대후매도사업'의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.

이 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 뒤, 향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기존에는 임차인이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만 있었으나, 제도 개선 이후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.

또한, '원금균등상환' 방식을 선택하면 초기 2년 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받아 영농 초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.

진천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임승수 씨는 진천지사를 통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을 비롯해 공공임대, 장기임대차 등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며 영농 규모를 키웠다.

임 씨는 농지은행 덕분에 목돈 부담 없이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
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"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할 때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.



이재기 기자 news3090@hanmail.net